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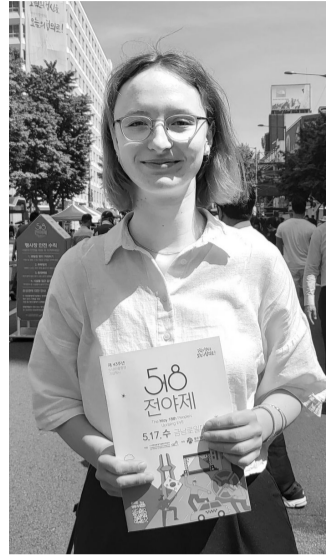
“연대·나눔의 위대한 광주정신, 후대에 계속 전해야죠”

5·18 전야제 금남로에서 만난 사람들

타지역·외국인·학생 참여 많아
독일서 온 잔야 “5·18정신 감동”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 눈에 띄어
초등생 서정아양 “광주 자랑스러워”
놀이공원보다 전야제 참석 더 의미
“5·18정신 헌법 수록” 한목소리도



서정아(가운데)양 가족



독일 출신 잔야



용산초 2학년 손하은군



남평중 3학년 김은수군



인천에서 온 현유섭씨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둔 17일 광주 시 동구 금남로에는 1980년의 모습이 재현됐다.

43년 전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금남로에 모였던 학생들의 정신을 이어받기 위한 시민들과 외국인들의 발길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날 금남로를 찾은 이들은 5·18 정신을 배우고 오월 영령들의 정신을 조금이나마 가슴에 새기고 싶어 현장을 찾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또한 “미래세대에게 5·18 정신을 꾸준히 교육해 나가야 한다”며 “대통령 공약이었던 5·18정신 헌법 수록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에서 하루전인 16일 광주를 찾았다는 대학생 현유섭(24)씨는 “사진과 뉴스로만 보던 5·18 현장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 광주에 왔다”면서 “어제는 5·18 기록관에서 많은 영상과 기록물을 직접 찾아 보고, 오늘은 현장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 전야제에 왔다”고 방문의 이유를 밝혔다.

현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했던 ‘5·18 정신 헌법 수록 공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5

·18 민주 정신을 헌법에 수록해 미래세대에게도 그 가치를 전달해야 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공약인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씨는 16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발표에 대해서도 “전두환은 당시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발표 명령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하나씩 진실이 밝혀지는 것 같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금남로를 찾은 외국인도 있었다. 독일에서 온 교환학생 잔야(여·Ganja·27)씨는 “5·18의 민주정신과 희생정신에 감동했다”며 전야제에 참석한 소감을 밝혔다.

잔야씨는 “난민을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 중인데, 국가 폭력에 의해 희생당한 소수자라는 점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과 난민 사이 비슷한 점이 있다”며 “평소 한국 역사에 관심이 많았는데, 광주에서 현장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금남로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들었는데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올라왔다”며 “주먹밥도 먹으며 1980년 당시 대통령 정신을 한껏 느끼고 있다”고 웃어보였다.

그는 “광주의 소중한 자산인 5·18의 민주정신, 희생정신을 미래세대에게 널리 알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랑스러운 역사를 알리기 위해 자녀들과 함께 찾은 가족들의 발길은 울해도 이어졌다.

광주시 동구 용산동에서 온 오소정(여·36)씨는 광주용산초 2학년 아들 손하은(9)군에게 1980년대 학생들이 입었던 검은색 교복을 입혀 전야제 현장을 찾았다.

오씨는 “광주에서 살고 있는만큼, 아이들에게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에 대해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 함께 나왔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아이들은 어려서 5·18에 대해 잘 모르지

만, 예전 군인이 지배하던 시절이 있었다는 식으로 5·18에 대해 조금씩 교육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도 5·18 헌법 정신 수록을 공약으로 건 만큼, 미래세대에게 꾸준히 5·18에 대해 교육해 나가야 한다”고 자녀들을 데리고 나온 이유를 밝혔다.

아이들도 현장분위기를 보고 광주가 자랑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광주 화정초에 다니는 서정아(13)양과 서윤정(10)양 자매는 “당시 시민군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광주는 없을 것 같다”며 “5·18민주화 운동이라는 역사와 이런 문화를 갖고 있는 광주가 자랑스럽다”고 뿌듯해 했다.

이들은 “5·18에 대해 배울 때마다 눈물이 난다”면서 “5·18 행사에 자주 참여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기 위해 앞으로 계속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약속했다.

남평중학교에서 체험학습을 온 3학년 김은수

(16)군은 “놀이공원보다는 전야제에 참석하는 것이 훨씬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군은 “그동안 책으로 5·18을 배우며 크게 느끼지 못했는데, 오늘 민주묘지와 전야제 행사에 참가하니 슬픔과 감동이 밀려온다”며 “5·18 정신을 광주 뿐만 아니라 전국에 알리기 위해 헌법에 수록은 물론, 우리 같은 미래세대들도 꾸준히 공부해 나가야 된다고 느꼈다”고 하루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아이들은 전유원씨의 사과 행보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조금 진심이 아닌 것 같다고 의심했지만, 오늘 민주묘지에 갔다는 기사를 보고 진정성을 믿게 됐다”며 “할아버지가 못한 부분을 손자가 하고 있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말했다.

/글·사진=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전국 시·도교육감 전원 참석 오늘 광주서 총회 연다

5·18 43주년 맞아 일정 앞당겨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5·18 43주년을 계기로 광주에서 총회를 열고 현안을 논의한다.

광주시교육청이 18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제9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는 애초 25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5·18 전국화와 세계화를 위해 5·18 기념식에 참석하려

는 시·도 교육감들이 뜻을 모아 일정을 조율했다.

전국 시·도 교육감 전원인 5·18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처음이다.

협의회에는 17개 시도의 교육감이 참석해 중등교육정책위원회(CC)TV와 CCTV통합관제센터 간 연계 설치 근거가 되는 아동복지법 개정 요구 등 모두 8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최근 논란이 된 ‘교복 답합’ 사안과 관련, 기타 협의 발언을 통해 교육청

간 공동 대응을 촉구할 예정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전국 시도교육청 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지방 교육자치의 확립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 교육감은 17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개최되는 만큼 대한민국 아이들이 5·1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배우고 삶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전장연, 광주 찾아 장애인 이동권 보장 촉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7일 광주를 찾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전국단위 단체인 전장연은 이날 300여명의 단체 소속 장애인 및 활동가들과 함께 광주 송정역 승강장에 모여 ‘열차타는

사람들, 5·18 광주에서 민주주의 외치다!’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는 “민주주의의 상징인 5·18이 43주년을 맞았지만 장애인권은 43년 전에 멈춰있다”며 “장애인의 이동권과 노동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곧 민주

주의를 완성하는 사회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이후 휠체어 장애인 50여명은 송정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해 농성역까지 이동하며 중간역에서 하차하는 방식으로 이동권 보장 시위를 했다. 이 과정에서 10분간 열차 지연이 발생했지만, 운행에 큰 차질은 빚어지지 않았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대위변제안 휘방하려 모금운동? 사실과 달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일부 언론서 악의적 보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어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제3차 대위변제안을 휘방하기 위해 모금운동을 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시민모임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까지 모금을 진행한 것도 없고 아직 모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는데도 일부 언론이 악의적으로 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일부 언론에서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인 시민모임 측이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의 판결금 지급을 위해 대국민 모금을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보도를 했다.

같은 보도에서 시민모임측이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재판을 기념해 오는 23일에 기자회견을 연다는 구체적 발표 시점까지

언급했다.

이에 시민모임은 일부에서 모금을 통해 피해자들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이 제시됐을 뿐 구체적으로 모금에 대한 계획조차 없었다고 즉각 반박했다.

시민모임은 “정부가 일본 피고 기업 배상 책임을 면제하기 위해 ‘판결금’이라는 법률에도 없는 명목을 붙여가며 굴욕적인 3차 변제를 강행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빚바치고 있다”면서 “가·피해자가 뒤바뀐 상황에서 피해자를 외롭게 놔둘 수 없다며 지원방법을 모색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이 보도와 관련해 사전취재나 문의조차 받지 않았다. 악의적 의도를 갖고 지원단체의 활동을 편파적으로 보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싼 **임야, 삽니다**
맹지사절. 010-9582-7400

대인동 **상업용지, 매매**
신안동

대인동 - 156평, 매매 - 21억

신안동 - 176평, 매매 - 23억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득, 변경가

문의. 010-3605-5000